



韓 · 유럽간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

최근 EU의 경기 호조로 韓 · EU간 교역은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양 지역간의 경제 규모와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韓 · EU간의 경제 교류는 크게 미진한 실정이다. 최근 EU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워 우리나라에 국내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3 개국의 회원국이 늘어난 이번의 EU 확대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양 지역간의 상호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경험 확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 협력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번 김대통령의 유럽 방문시 EU와 체결키로 합의한 「기본협력협정」은 향후 양 지역의 포괄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민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국제경제학(經博)

■ 확대되는 유럽연합(EU)

1995년을 맞아 EU는 새로운 확대 국면을 맞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의 3 개국이 새 회원국으로 추가된 EU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되었다. 이번 확대로 EU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강화된 발언권과 협상력은 域外國에게 더욱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며 상대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EU는 앞으로도 통화 · 정치 통합의 가속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동유럽 및 지중해 지역으로의 外延的 확대에도 관심을 쏟는 등 유럽 대륙과 북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구상하고 있다. EU의 확대는 우리와 같은 역외국에게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것이다. 새 회원 국가들은 EFTA에 속해 있었고 양대 경제권 사이에는 이미 94년 1월부터 EEA 협정으로 자유 무역이 가능하였으며, 북유럽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이 EU보다 낮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정태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역 창출 효과(trade creation)¹⁾보다는 무역 전환

1) 무역 창출 효과란 관세 동맹으로 양교역국간의 관세가 철폐되어 이제까지 무역이 없었거나 소량이었던 상품의 무역이 역내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하며, 무역 전환 효과란 제 1국이 제 2국과 관세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관세 철폐분 만큼 수입품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제 1국이 제 3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제 2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무역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함. 즉 품질이 비슷한 한국과 스페인산 TV의 자국내

효과(trade diversion)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이 세 국가들에게 수출하였던 역외국들의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EU 경제 활성화로 수입 수요가 확대되어 對EU 수입 및 투자 기회도 확대되므로 우리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韓·EU 교역 및 직접 투자 현황

교역 현황

EU 경제는 지난 91년부터 저성장, 고실업으로 대변되는 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려 왔다. EU는 93년에 68년 EC 통합 이후 2 번째의 마

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4년 EU 경기는 지난 3 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 경기를 보이고 있으며, 95년도 EU 경제 성장률은 약3%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93년 10.9%, 94년 11%)을 유지하여 왔던 EU는 향후 실업 감소 효과도 다소 기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호조인데다 독일이 統獨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고 있고, EU 국가들의 국내 경기 활성화 정책이 주요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지난 4 년간(1991~94)의 對EU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3.0%로, 동기간의 우리나라 연평균 총수출 증가율 10.1%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총수출 가운데 對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년의 경우 11.1%로 對美(21.4%), 對日(14.1%)에 비해서 열세이다. 총수입 가운데 EU로부터

<표 1> 한국의 對EU 교역 추이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	증가율	19.7	9.6	-5.1	2.0	12.8
	수출 비중*	13.7	13.5	12.4	11.4	11.1
수입	증가율	29.6	17.3	-3.0	6.1	30.2
	수입 비중*	12.1	12.1	11.7	12.1	12.9
對EU 무역 수지(백만 달러)		455	-151	-351	-755	-2,621

자료: KOTIS.

*전세계 수출, 수입 중 EU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판매 가격이 각각 10만 원, 11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스웨덴에서 지금까지 국산 TV를 12만 원(10만 원은 제품 가격이고 2만 원은 관세라고 가정함)에 수입하였으나 EU가입 후부터는 역내 무관세 때문에 더 저렴한 11만 원짜리 스페인 제품을 수입하게 되어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된다.

의 수입 비중도 94년의 경우 12.9%로 對美(21.1%), 對日(24.8%)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별 교역 비중을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4 개국이 전체 교역의 80%에 달

하고 있다. 94년도에는 수출(11.4%)보다 수입(28.5%)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무역 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과거 전통적으로 우리의 무역 흑자국이었던 EU는 91년부터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증가하는 무역 적자는 일반적인 수출 부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경기의 호조로 사치성 소비재와 일반 기계 제품, 철강 제품 등의 설비 자재 수입이 급증한 반면 수출이 부진한 때문이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이 중국, 동남아 등과 같은 후발 개도국의 공세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對EU 수출 상품의 구조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 주종 품목이 과거의 섬유류와 가전 소비재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내구 소비재와 같은 품목으로 변화되고 있다.

직접 투자 현황

한국의 對EU 투자는 건수나 금액 면에서 우리나라 해외 총투자의 5%와 8%를 차지하여 일본의 4.8%, 3.2%보다는 약간 많으나, 미국이나 동남아 등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EU 통합에 따른 대내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역내 기업화(현지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90년대 들어 연평균 50%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93년 말 현재 잔존 투자 기준으로 무역업이 금액 대

비 전체의 59%로 제일 비중이 크고 제조업이 38%, 기타 서비스업이 3%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對韓 투자도 461 건에 23억 6천만 달러로 미국 및 일본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EU로부터의 기술 도입도 일본, 미국에 비해 저조하다. 지난 60년부터 93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대외 기술 도입 8,059 건 중 17.6%인 1,418 건이 EU로부터 이루어져 일본(50.2%), 미국(26.7%)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24.8%), 정유 화학(17.3%), 전기 전자(14%)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가 주 도입국이다.

<표 2> 한국의 해외 지역별 투자 현황
(1993년 말 현재)

구분	EU	북미	동남아*	일본	전세계
건수	137(5.0)	553(20.1)	1,527(55.4)	131(4.8)	2,755(100)
금액(백만 달러)	446(8.0)	2,192(39.3)	2,014(36.1)	176(3.2)	5,578(100)

자료: 구주통상정보.

주: 잔존 투자 누계.

* 동남아는 일본 제외, ()는 점유율(%)임.

<표 3> 세계 각국의 對韓 투자 현황
(1994년 6월 말 현재)

구분	EU	미국	일본	전세계
건수	461(10.2)	1,100(24.3)	2,411(53.2)	4,531(100)
금액(백만 달러)	2,365(19.7)	3,494(29.1)	4,643(38.7)	11,997(100)

자료: 구주통상정보.

주: 허가 기준 누계이며, ()는 점유율(%)임.

韓·EU의 통상 현안

EU는 로마조약 제 111조와 113조에 따라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국들의 개별 무역·통상 정책을 EU 차원의 공동 정책으로 조화시키는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회원국들의 경제 사정에 따른 입장 차이로 회원국들의 독립적인 통상 정책을 일부 인정하는 복잡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EU는 EFTA, 동구, ACP 등 많은 역외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특혜 무역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와 같은 비특혜 무역 협정국들에게는 무역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U의 대외 통상 정책은 또한 통합의 진전에 따라 그 내용도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 WTO의 출범으로 EU 무역관련 규정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간 적용되어 오던 수입 감시제 및 간접 수입 금지제도는 93년 단일

시장 출범에 따른 상품의 역내 자유 이동으로 철폐되었으며, 회원국별 수량 제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EU 총량 쿼터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EU 통상 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반덤핑 규제 강화, 신규 일반 특혜 관세(GSP) 제도의 운용, 신통상 정책 수단(NCPI)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의 강화

반덤핑 규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역 제한 조치 중의 하나로 과거에는 동구권, 일본, 미국 등이 주규제 대상국이었으나, 87년 이후부터 동남 아시아 국가들로 그 대상이 전환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산 제품의

<표 4> EU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현황(94년 2월 말 현재)

품 목 명	규제 형태 및 덤핑 관세율(%)	규제 개시월	'93 수출 실적 (백만 US\$)	비 고
컬러 TV(16" 이하)	확정관세 : (10.2~19.6)	90.04	14	재심 추진
일회용 라이터	" " : (22.7)	91.11	0.1	
오디오 테이프	" " : (2.6~9.2)	91.05	47	
카라디오	" " : (0.6~34.4)	92.08	55	
폴리에스터 단섬유	" " : (1.6~4.8)	91.11	6	
전자 저울	" " : (7.2~26.7)	92.04	2	
대형 축전기	" " : (70.6)	93.03	16	
플로피 디스크	" " : (8.1)	92.09	8	
DRAM	" " : (24.7)	91.03	861	GSP제외
컬러 TV(17" 이상)	잠정관세 : (16.8~18.8)	94.10	140	조사중
글루탄산나트륨	가격 인상 합의	90.06	6	재심중, GSP제외
앨범	가격 인상 합의	90.05	11	
비디오 테이프	재심중(1.9~3.8)	89.06	168	재심중
전자레인지	조사중	93.12	176	

자료: 한국무역협회.

역내 수입이 크게 늘어나자 역내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EU는 아시아 국가들에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였다. EU는 미국에 비해 반덤핑 정책에 훨씬 덜 의존한다고 생각하여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여 최근에는 미국에 상응할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 협정으로 반덤핑 규정이 다소 강화되어 자의성이 많이 배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자의적인 무역 규제 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아직도 많다.

한국은 95년 2월 말 현재 <표 4>와 같이 14개 품목(조사중 포함), 93년 수출 실적 15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 EU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올 3월 초 발표한 제 12차 반덤핑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93년 말 현재 한국은 12건으로 중국 23건, 일본 및 터키의 각 18건에 이어 EU의 제 4위 반덤핑 규제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DRAM, VIDEO 테이프, 컬러 TV 등이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반덤핑 규제는 그 품목들이 우리의 주종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EU로부터 비교적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구조가 특정 품목을 집중 수출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EU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상이 크기 때문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우리의 주종 수출 품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제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94년 1~9월 동안 국산차는 7만 5,327대가 수출되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12%(일본차는 -7.2%)인 반면, 93년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은 498대였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EU 시장 진출에 이어, 최근 대우도 1%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는 등, 한국차의 시장 확대 움직임이 EU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EU는 국내의 자동차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EU내의 국산차 수입 규제 문제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신규 일반 특혜 관세(GSP)제도의 적용

반덤핑의 강화와 더불어 우리의 對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GSP제도의 운용 방식 개편을 들 수 있다. 1971년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후진국들에게 GSP를 공여했던 EU는, 최근 들어 매년 GSP 공여 폭을 감축하여 왔으며 95년부터는 품목별·국별 졸업 방식을 채택하여 선발 개도국에 대한 특혜가 줄어들게 되었다. 한정된 GSP 재원으로 개도국의 개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발 개도국의 혜택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작년 12월 EU 각료이사회는 95년도 기준 1인당 GNP 6천 달러 이상인 한국을

포함한 홍콩, 싱가포르 등 12 개국의 수출품에 대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996년 1월부터 GSP의 공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GSP 혜택을 받던 917 개 품목의 56.6%인 519 개 품목이 95년 4월 1일부터 GSP 마진 폭의 50%가 감축되고 96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에서 GSP 수혜를 받는 품목의 금액 대비 수출 비중은 약 20% 정도이며, 연간 약 3억 달러 상당의 수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UR 협상으로 EU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7.93%에서 5.41%로 낮추기로 되어 있으나 이 효과의 일부가 상쇄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對EU 주종 수출 품목인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거의 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신통상 정책 수단(NCPI)과 對아시아 정책 보고서의 채택

끝으로 EU의 대외 통상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작년 EU 이사회에서 채택된 「신통상 정책 수단」과 「對아시아 정책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말 채택된 「신통상 정책 수단」은 과거의 방어 차원을 넘어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목된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도 가할 수 있는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용 여하에 따라 美통상법 301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개정된 신통상 정책 수단에서는 규정 적용 범위가 종래의 상품 분야 및 역외국의 위법적 통상 관행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까지 확대되었으며, 반덤핑 제조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개별 기업들에게도 제조권을 부여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제조 대상 범위도 확대해 역외국의 위법적 통상 관행뿐만 아니라 무역상의 역효과(Adverse Effects on Trade)를 주는 역외국의 제반 조치, 법령, 관행 등이 포함되어 통상 마찰의 여지는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U의 통상 정책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 분석하고 EU의 역내 산업 보호에 대비한 현지화 전략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對아시아 정책 보고서」에서 EU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EU는 한국과 아시아의 역동적인 시장을 중시하여 21세기에 아시아가 美·日의 독무대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기술 협력, 직접 투자의 확대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EU이사회는 96년도 1/4분기 중 EU·아시아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에 수출 확대의 거점 마련을 위해 가칭 「독일의 집」, 「프랑스의 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신통상 정책 수단」과 「對아시아 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EU의 對韓·아시아 정책은 일면 협력, 일면 견제의 양면성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유연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EU는 80년대 말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 무역을 강조하여 최근에는 한국과 아시아에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의 수출에 대해서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입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EU는 한편으로 우리의 수출 상품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의 교역 확대와 경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 韓·EU 경험 확대 전망

최근 EU의 경기 호조로 韓·EU間 교역은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나, 양지역간의 경제 규모와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에 비하면 韓·EU間의 무역, 투자 등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韓·EU간의 경제 관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증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 증대, APEC에서의 우리의 위치,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EU에게 한국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는 이미 93년 6월 EU 이사회가 채택한 「한국 관계 검토 보고서」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반면 EU는 우리에게 유망한 수출 시장이자 중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 대상국이며, 향후 동구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또한 美·日에 편중된 대외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유럽과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양지역간의 경제 교류를 위한 상호 필요성은 크나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양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공통 분모로 하여 협력을 강화할 경우,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 3월 김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한·유럽간은 새로운 협력 시대의 막이 열렸다. 유엔 사회 개발 정상 회의 참석을 전후하여 시행된 이번 유럽 순방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韓·EU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다. 또한 개별 순방국과 체결된 구체적인 경험 협정들도 성과 중의 하나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나라가 EU와 「기본협력협정」의 조기 체결에 합의한 것은 향후 양지역간의 경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본협력협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나, 특히 통상 마찰 가능성의 사전 협의, 최혜국 대우의 강화, 산업·환경·지적재산권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의 경제 협력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양지역간에 상호 직접 투자, 과학 기술 협력, 중소기업간·산업간 협력 등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향후 우리의 수출 증대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품질 및 서비스 면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여야 하며, 바로 이런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EU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세계 시장의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